KIEP 오늘의 세계경제
WORLD ECONOMY TODAY

| 지역연구 |
2015년 5월 18일 Vol. 15 No. 14
ISSN 1976-0515

인도 거시경제 안정과 모디노믹스 1년의 성과

• 이 웅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wlee@kiep.go.kr, Tel: 044-414-1139)

• 이정미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leejm@kiep.go.kr, Tel: 044-414-125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_ 044-414-1114 FAX_ 044-414-1144
http://www.kiep.go.kr

차 례

1. 인도경제 성장의 토대: 거시경제 안전성 확보
2. 모디노믹스 1년의 성과
3. 전망과 시사점

주요 내용

▶ 인도의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7.5%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최근 IMF는 인도 성장률을 2015년과 2016년 각각 7.5%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성장률을 추월하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세임.
- 이러한 인도의 고(高)성장 추세는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 호황이 아닌 모디노믹스의 효과 및 기대와 이에 따른 인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최근 인도경제의 고속성장은 인도중앙은행(RBI)의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으로 물가와 재정수지 등에 대한 건전성이 확보된 가운데 모디노믹스로 탄력을 받은 데 기인함.

- 2013년 이후 RBI와 인도정부가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 달성을 위해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2013년 11%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는 최근 5~6%로 안정되었으며, 2013/14년 GDP 대비 4.6%였던 재정적자는 2014/15년 4.1%로 축소됨.

▶ 2014년 5월 출범한 모디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개방 정책 추진은 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음.

- 모디 정부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Make in India' 캠페인을 비롯하여 인프라 구축, 경영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모디 정부는 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 중이며, 2015/16년 예산의회(2~3월)에서 개혁을 위한 각종 정책을 입법화하여 주요 개선사항이 가시화되고 있음.

▶ 모디 정부는 지난 65년간 인도 개발계획을 전담하던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를 해체하고 '인도 국가개조기구(NITI Aayog: National Institution for Transforming India)'를 설립함.

- 2015년 1월 설립된 '인도 국가개조기구'는 장기적·통합적 개혁정책 추진을 통해 모디노믹스를 실현하여 인도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됨.

▶ 인도의 거시경제 안정 기조가 지속된다면, 모디 정부의 △ 투자확대 △ 정책 공조 및 연계 △ 정부 효율성 및 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정부신뢰 회복이 가능해지고, 이는 향후 인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고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인도의 부상은 지금까지 회자되었던 인도경제의 무한한 가능성 논쟁과는 달리, 인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중국에 버금가는 세계경제대국으로의 부상이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단기적으로 Make in India, Clean India, Skill India, Digital India 등 모디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가 요구됨.
- 장기적으로 Make in India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경우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할 가능성을 고려, 대인도 경제협력의 전면적 확대개편이 필요함.

1. 인도경제 성장의 토대: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

가. 인도경제 동향

■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부터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IMF는 2015년 4월 발간한 *World Economic Outlook*에서 2015년과 2016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7.5%로 전망하였는데, 동 기간 중국의 6.8%와 6.3%보다 높을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임.[1)]
-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국제 거시경제 데이터 예측에서도 2030년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함.[2)]
- 이러한 인도의 고(高)성장 추세는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 호황이 아닌 모디노믹스 효과에 따른 인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모디노믹스(Modinomics)는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의 경제정책을 의미하며, 오랜 기간 동안 계획경제와 부정부패 등으로 고착화된 인도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시장경제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제조업을 인도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최근 인도는 2014년 3/4분기 8.2%에 이어 4/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7.5% 성장하여 2분기 연속 7% 이상의 견고한 성장세를 실현함.[3)]

- 모디노믹스로 대변되는 고성장·친기업 정책으로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상승률 둔화와 실질소득 증가의 혜택을 봄에 따라 모디 총리 취임 이후 2분기 연속 7% 이상의 성장률이 달성됨.

그림 1. 인도 경제성장률

주: 2015년 1월 발표된 개정 성장률임.
자료: 인도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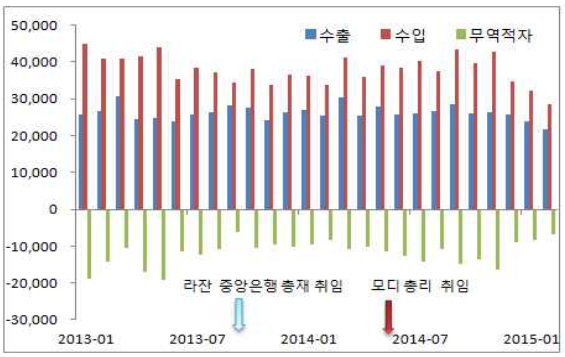
1) IMF(2015), *World Economic Outlook*, p. 2. (April)
2)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http://www.ers.usda.gov/data-products/international-macroeconomic-data-set.aspx, 검색일: 2015. 4. 27).
3) 인도 통계청은 2015년 1월 30일 GDP 기준연도를 2004/05에서 2011/12 회계연도로 조정하였으며, 대부분 국가들의 국민계정 산출방식에 부합하도록 GDP 산출방식을 요소비용 기준(factor cost)에서 시장가격 기준(market price)으로 변경하였음. 따라서 2013/14 경제성장률은 4.7%에서 6.9%로 수정되었으며, 인도정부는 2014/15 성장률 추정을 5.5%에서 7.4%로 상향 조정하였음.

- 2012년 1,929억 달러의 무역적자는 금 수입 관세인상, 금 수입 규제,[4] 루피화 가치 급락, 국제유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2013년 1,509억 달러, 2014년 1,415억 달러로 축소됨.[5]

○ 무역적자 감소로 2012/13년 GDP 대비 4.7%에 육박하던 경상수지 적자는 2013/14년 1.7%로 축소되었으며, 2014/15년 1.3%까지 축소예정임.[6]

그림 2. 인도 교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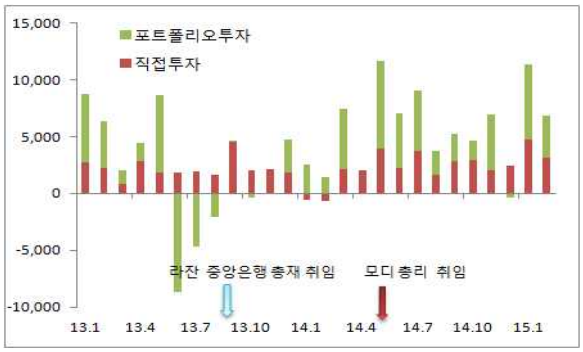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IC.

그림 3. 인도 외국인 순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IC.

■ 2013년 9월 라구잠 라잔(Raghuram Rajan) 인도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 총재 취임 이후 외국인투자 순유출이 순유입세로 전환되었으며, 2014년 5월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외국인투자유입이 급격히 증가함.

- 2013년 5월 미국의 양적완화축소 발표 이후 6~8월 간 154억 달러가 순유출되었던 인도 포트폴리오 투자는 라잔 총재 취임 이후 순유입세로 전환되었고, 모디 총리 당선 이후 월평균 약 39억 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 자금 순유입을 유지해오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는 모디 총리 당선 이후 2014년 5월~2015년 2월 9개월간 전년동기대비 77% 많은 295억 달러가 순유입됨.

■ 금융시장은 외국자본이 순유입으로 전환된 2013년 9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루피/달러 환율은 61~62루피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외국자본 유입의 증가와 함께 인도 뭄바이주가지수(SENSEX)는 신고점을 지속적으로 돌파하여 2015년 4월 22일 현재 2만 7,890으로 2013년 8월 말 대비 50% 상승하였음.
- 2015년 2월 외환보유고는 3,464억 달러로 2013년 8월 2,754억 달러보다 661억 달러(약 24%) 증가함.

4) 2013년 7월 RBI는 자국 수입업체가 해외에서 반입한 금 물량의 20%를 재수출하도록 규제함.
5) 2013년 금 수입관세를 6월(4 → 8%), 8월(8 → 10%) 2차례 걸쳐 인상하고, 금 수입 물량의 20%를 재수출하도록 규제하였으며, 8월 루피화 가치는 연초대비 약 20% 하락함(그림 4 참고). 한편 2014년 하반기 국제유가 하락은 인도 무역적자 감소에 기인함.
6) 경상수지 적자는 2012/13년 880억 달러에서 2013/14년 324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며, 2014/15년은 RBI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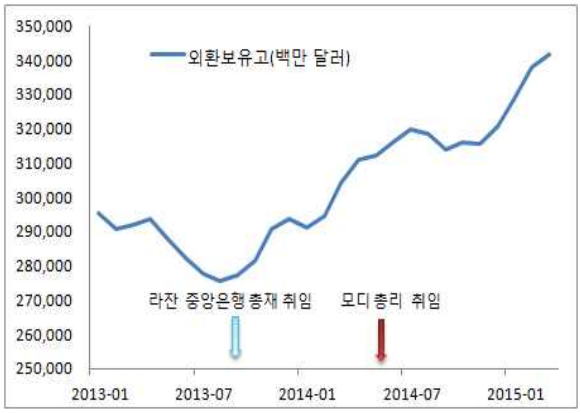
그림 4. 환율 및 주가 추이

(단위: 루피/달러)

자료: CEIC.

그림 5.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IC.

■ RBI와 인도재무부 간 정책공조와 RBI의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으로 물가,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에 대한 건전성이 확보된 가운데, 모디노믹스로 대변되는 개혁·개방 정책이 최근 인도경제의 고속 성장을 견인함.

나. 경제성장의 토대: 거시경제 안전성 확보

■ 2013년 이후 RBI와 인도정부는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 달성을 위해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3년 11%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는 최근 5~6%로 안정되었으며, 2013/14년 GDP 대비 4.6%였던 재정적자는 2014/15년 4.1%로 축소됨.

- **[긴축 통화정책]** RBI는 2013년 9월 라잔 총재의 취임 이후 3차례에 걸쳐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물가안정을 달성하여 모디 정부 경제부흥정책의 기틀을 마련함.
  - ○ 취임 후 라잔 총재의 첫 번째 금리인상은 인도 성장률이 하향세일 때 이루어진 것으로, 물가안정이 RBI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각인시킴.
  - ○ RBI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015년 1월 8%, 2016년 1월 6%까지 낮추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이후 1년 동안 금리를 동결함.
  - ○ 더불어 채소가격 안정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6% 내외로 완화되고, 지난 5년간 10%를 상회했던 기대물가상승률이 8.9%까지 하락함.[7)]

7) 라구람 라잔 RBI 총재는 인도의 기대물가상승률이 너무 높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를 낮춰야 한다고 함(Zee Newes 2013. 10. 30), “Inflationary expectations high, will take tough stance: Rajan”) 지난 5년간 지속된 10% 이상의 높은 기대물가상승률은 △ 금 수요 증가 △ 저축 둔화 △ 루피화 불안정을 야기했음(IMF 2014. 2. 20, “India: Economy Stabilizes, but High Inflation, Slow Growth Key Concerns”).

표 1. 라잔 RBI 총재 주요정책 정리

거시경제안정	1.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재무부와 공조하여 물가상승률 목표를 제시하여 명확한 통화정책과 대중의 이해를 도모 2. 국제기준 도입: 정책 물가기준을 도매물가에서 소비자물가로 변경(2014년 4월부터) 3. 환율 안정화: RBI는 8월 말 루피화의 급격한 가치하락에 대응하여 환율을 안정시키고 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킴. 4. 경상수지적자 감소: 2012년 5.0% → 2013년 2.6% → 2014년 1.3%(GDP 대비)
기타	5. 인도의 은행시스템 개혁: 외국은행에 시장을 추가 개방하여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 6. ATM 설치를 포함한 민간 금융서비스 확대, 부실금융 축소, 금융건전화정책 시행

자료: 인도 언론자료 종합.

- **[긴축 재정정책]** 인도정부는 2012년에 발표한 재정 감축 로드맵에 따라 재정적자를 2014/15년 GDP의 4.1%, 2016/17년 GDP의 3.0%까지 감축하는 재정 건전화 목표를 수립함.
  - ○ 2011/12년 GDP의 6%에 육박하는 재정적자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은 인도정부가 과도한 재정적자를 줄이지 않을 경우 인도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이라 경고하기도 하였음.
  - ○ 2013/14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4.6%로 재정적자 목표치인 4.8%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14/15 재정적자 또한 목표치 4.1%를 달성함.[8)]
- **[통화정책 공조]** 인도 재무부와 RBI는 2015년 2월 20일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협약(Agreement on Monetary Policy Framework)'을 체결함.
  - ○ 이 협약은 2016년 1월까지 물가상승률 6%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17년 이후의 물가상승률은 4(±2)%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향 안정됨에 따라, 2015년 인도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차례에 걸쳐 0.5%p 인하하였으며, 인도 재무부는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성장기조의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함.

- 물가안정 추세에 확신을 가진 RBI는 기준금리를 2015년 1월과 2월 각각 0.25%p 인하함.
  - ○ 라잔 총재가 목표하는 인도의 적정 실질금리는 1.5~2%이므로,[9)] 투자촉진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의 가능성도 있음(그림 8 참고).
- 한편 인도정부는 2015/16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완화하여 인프라 투자를 위한 추가 재정을 확보함.
  - ○ 기존 재정적자 감축목표(GDP 대비): 2015/16년 3.6%, 2016/17년 3%
    수정 재정적자 감축목표(GDP 대비): 2015/16년 3.9%, 2016/17년 3.5%, 2017/18년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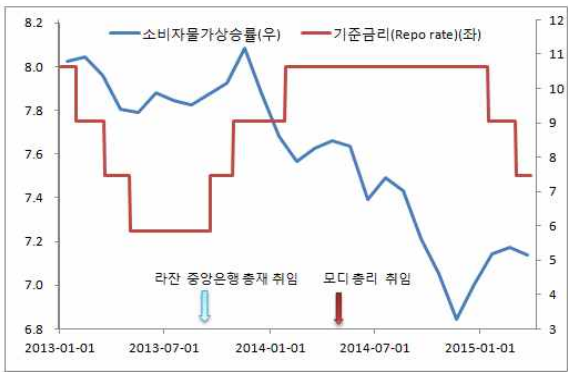
8) 2012/13년 재정적자 목표치는 GDP의 5.3%였음. 당시 인도정부는 재정적자 목표치를 5.1%에서 5.3%로 상향 조정했으나 회계연도 말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보조금 삭감, 정부지출 연기, 공기업 지분 매입 등의 방법으로 재정적자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바 있음.

9) Bloomberg Business, "India CPI Unexpectedly Eases, Boosting Chances of Rate Cut,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04-13/india-cpi-unexpectedly-eases-boosting-odds-of-another-rate-cut(2015. 4. 27).

○ 인도의 높은 재정적자에 우려를 표하던 신용평가사 Moodys는 2015년 4월 재정적자 감축목표 완화에도 불구, 인도 신용평가 등급 전망을 Baa3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함.

그림 6. 기준금리 및 물가

(단위: %)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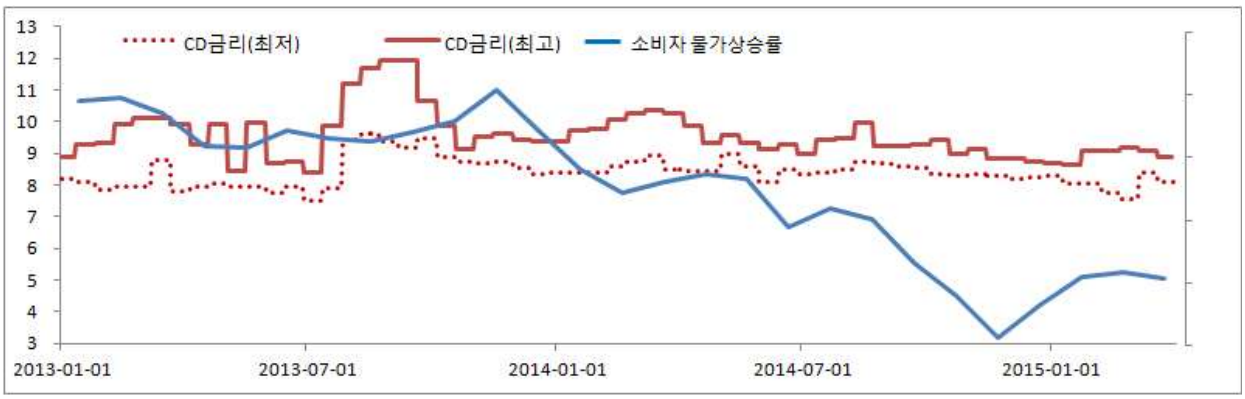
그림 7. 재정적자 추이

(단위: %)

자료: CEIC.

그림 8. 인도 단기채권이자율(CD)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자료: CEIC.

2. 모디노믹스 1년의 성과

가. 개혁·개방 정책 추진

■ 모디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위한 개혁·개방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 정도에 불과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모디 정부는 'Make in India' 캠페인을 비롯하여 인프라 구축, 경영환경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토지법, 노동법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모디 총리는 취임 직후 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이 경제부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됨.

표 2. 모디 정부의 10대 국정과제와 개선상황

국정과제	주요 개선상황
1. 정부 신뢰구축	■ 공무원 근태관리: 고위 공무원 대상 실시간 출근 체크 시스템 가동
2. 창의적 의사결정	■ MyGov 온라인 플랫폼: 2014년 7월부터 정책 수립에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3. 보건, 교육, 수자원 개선	■ Clean India 캠페인: 위생교육을 통해 국민의 위생에 대한 인지도와 태도를 개선하고, 5년 이내 인도 모든 가구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 ■ Skill India 프로그램: 인도 재무부는 2015/16년 예산안에서 동 프로그램에 약 500억 루피(약 8억 달러)를 배정 ■ 갠지스 강 개발 계획(The National Ganga Plan): 갠지스 강을 포함한 주변 강들을 보호 및 개선하기 위해 2015/16년 예산안에서 약 210억 루피 (약 3.3억 달러)를 배정
4. 정부 투명성 강화	■ 블랙머니 환수를 위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세회피처에 숨겨진 5,000억 달러 규모 블랙머니에 대한 환수 진행 중 ■ Digital India를 통한 E-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정부구축을 추진 중
5. 부처간 협력 강화	■ RBI와 인도재무부의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협약' 체결 ■ 인도 상공부는 모디 정부의 핵심정책인 Make in India, Digital India, Skill India와 연계된 5개년 대외통상정책을 발표
6. 국민의 정부	■ 사회보장 확대 ■ 포괄적 금융지원계획: 저소득층 및 농촌 지역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 개설 지원, 점포 개설 또는 출장형 금융서비스 지원
7. 경제성장	■ Make in India: 인도를 제조업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화학, IT, 자동차, 항만 등 25개 분야를 선정하여 지원 ■ 외국인투자 확대: 보험, 국방 분야 외국인투자 한도 상향 조정, 법인세 인하, 절차 간소화 등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확대
8. 인프라, 투자 개혁	■ 100개 스마트 시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철도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한도를 0%에서 100%로 확대하였으며, 아메다바드-뭄바이 구간(543Km) 초고속 열차 건설을 추진하는 등의 인프라부문 개선
9. 정책 시행의 시의성 확보	■ Pragati 개설: Pragiti(Proactive Governance and Timely Implementation)의 약칭[10)] – 모디 총리가 주재하는 월례회의(monthly conference)로 정책의 시행과 각종 고충사항을 토론할 수 있는 포털임. – 주 총리와 중앙정부 각료들이 참여
10. 정책의 안정성 확보	■ 조세회피 방지규정(GAAR) 연기 및 수정: 2016년 시행예정이었던 GAAR을 1년 연기하여 2017년부터 시행 예정, 법안논의 시점(2012년)부터 소급적용 규정을 법안 시행 시 적용으로 변경

자료: 언론자료 종합.

10) The Economic Times, "PM Narendra Modi will monitor projects vis 'Pragati' sessions, says Nripendra Misra," http://articles.economictimes.indiatimes.com/2015-03-14/news/60111696_1_nripendra-misra-public-grievances-pm-narendra-modi (검색일: 2015. 4. 27).

■ 한편 모디 정부는 2015년 2~3월 예산 의회를 통해 본격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표 3. 모디 정권의 주요 정책이슈와 성과

주요 정책이슈		진행상황
외국인직접투자(FDI) 한도 상향 조정		■ 철도, 국방, 보험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 한도 상향 조정 – 철도 0 → 100%, 국방 26 → 49%, 보험 26 → 49% ■ 국방 분야의 추가적 확대 기대
보험법 개정[11]		■ 2015년 3월 12일 인도의 보험법 개정안(Insurance Laws (Amendment) Bill 2015)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12] – 보험분야 외국인투자 한도를 26%에서 49%로 확대
탄광법 개정[13]		■ 2015년 3월 20일 탄광법 특별안(Coal Mines (Special Provisions) Bill 2015)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됨. – 40년간 국영기업이 독점해왔던 석탄판매권을 민간에 개방
토지법 개정		■ 2015년 예산의회 하원(Lok Sabha)을 통과하였으며, 2차 예산의회 상원(Rajya Sabha)에서 논의 중
노동개혁		■ 법안의 간소화 및 초과근무시간 확대 등 규제완화를 추진 중
재정부문	통합물품세(Goods and Service Tax) 도입	■ 2016년 4월 도입 예정
	보조금 개혁	■ 보조금 개혁을 통해 주요 보조금 지출을 점차 감축시킬 계획임. – 2013/14 2.2% → 2015/16 2.0% → 2016/17 1.6%(GDP 대비)
	주파수 경매	■ 2015년 3월 인도정부는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여 7개의 통신사로부터 1조 987억 루피(약 170억 달러)만큼의 수익을 올림.
	공기업 지분매각	■ 2014년 인도 최대의 국영철강사인 SAIL사의 지분을 5%매각한 데 이어 2015년 ONGC(Oil & Natural Gas Corporation), CIL(Coal India Ltd.) 등의 지분매각이 예상됨.

주: 토지법과 통합물품세(GST)의 경우 2015년 예산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나 이번 의회에서는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자료: 인도 언론자료 종합.

11) 보험법은 여당(BJP)의 상원(Rajya Sabha) 장악력이 18%(상원 전체의석 250석 중 45석)에 불과한 가운데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상원을 통과한 첫 번째 개혁 법안으로 의미가 있음.
12) 외국인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발의되었으나, 7년간 계류되어 있었음. 2014년 12월 인도정부는 보험 분야의 외국인투자 한도 완화를 포함하는 보험법 조례를 공포, 동 조례는 2015년 4월까지 효력이 있었으며, 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효력이 지속될 예정임.
13) 인도정부는 채굴권 배정에 전자경매 방식 도입과 석탄판매권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2014년 10월 승인한 바 있으며, 의회 통과로 행정명령안 효력이 지속될 예정임.

나. 인도 국가개조기구(NITI) 설립

■ 모디 정부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개혁정책의 추진을 위해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를 해체하고 2015년 1월 '인도 국가개조기구(NITI Aayog: National Institution for Transforming India)'를 설립

- 1950년 설립되어 65년간 인도 개발계획수립을 전담하던 인도 기획위원회는 대외 경제 변화에 대한 대응미흡과 낮은 효율성을 비롯한 부정부패 등이 문제가 되어 개혁이 요구되어 왔음.
- 이에 모디 정부는 천편일률적으로 경제를 주도한 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각 계층의 개발에 대한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NITI를 설립함.
- NITI는 주정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개발계획의 시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예정임.

■ 향후 NITI는 모디노믹스를 통해 인도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정부가 경제의 주체가 아닌 조력자로서 정책입안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명시함.
- 또한 NITI의 실무진 대표는 알빈드 파나가리야(Arvind Panagariya) 콜럼비아대(Columbia University) 교수가 지명되었는데, 파나가리야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인도경제를 보다 친시장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표 4. NITI Aayog 개요

구분	내용
목적	– 포괄적, 동등, 지속가능을 원칙으로 국가 목표를 수립
기능	– 주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을 도모, 분권화와 bottom-up방식의 계획 수립, 주정부 권한 강화 및 지원 등 협력적·경쟁적 연방제 도모 – 전문가들의 국가 정책에 대한 의견 공유, 지식과 혁신의 허브, 국가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 – 중장기 계획 수립, 국가개발계획 및 전략 수립뿐만이 아닌, 정책 및 프로그램 시행점검 역할을 수행하며 효율성을 도모할 예정
구성	– 정부위원회(Governing Council)와 지역위원회(Regional Councils)가 설치될 예정 – 위원장(모디 총리), CEO(전 기획위원회 Secretary Sindhushree Khullar) – 파나가리야가 부의장(Vice Chairman)으로 NITI의 실무진 대표를 담당 – 전 기획위원회 멤버인 Rajnath Singh, Arun Jaitley, Suresh Prabhu, Radha Mohan Singh 포함 – 특별 초청자로 Nitin Gadkari, Smriti Zubin Irani, Thawar Chand Gehlot 포함 – 상근(Full time) 구성원은 파나가리야 부의장, 경제학자 Bibek Debroy, 전 DRDO 대표 V K Sarawant가 포함될 예정 – 정부위원회는 모든 주총리 및 부총리를 포함

자료: Government of India(2015)[14] 및 언론기사 종합.

14) Government of India(2015), "From planning to niti transforming India's development agenda."

3. 전망과 시사점

■ 인도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2015/16년 인도경제가 8.1~8.5%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IMF 등 주요 기관 또한 2015년 인도의 성장률을 7.5~7.8%로 전망함.

표 5. 주요 기관별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인도 재무부 (2월)	인도 중앙은행 (4월)	IMF (4월)	WB (4월)	ADB (4월)
2015/16년	8.1~8.5	7.8	7.5	7.5	7.8
2016/17년	8.0~10.0	8.1	7.5	8.0	8.2

주: ( ) 안은 2015년 전망시점임.
자료: 언론자료 종합.

■ 모디 정부의 △ 투자확대 △ 정책 공조 및 연계 △ 정부 효율성 및 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정부신뢰 회복이 인도경제를 지속가능한 고성장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음.

- 모디 정부는 인프라 개선과 규제완화 등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총리의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세일즈 외교로 경제성장을 도모함.
- 인도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거시경제정책 공조, 정책의 연계성 확보,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정책적 협력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인도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공조(통화정책프레임워크)로 통화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또한 중앙정부는 정책의 연계성을 중시하여 최근 발표된 대외통상정책도 모디 정부의 Make in India, Skill India 등의 모디노믹스 정책 기조를 포함하고 있음.

○ 새로운 경제개발계획 기구인 NITI는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정책협력 확대를 목표로 함.

- 모디 정부는 정부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실질적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며,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부 신뢰를 회복하고 있음.

○ 모디 정부 수립 후 의회에서 36개의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Lok Sabha(인도의회 하원)의 경우 정해진 시간의 123.45%, Rajya Sabha(상원)의 경우 106.79% 이상의 시간 동안 활동함.

○ 대외통상정책은 과거 매년 개정되었으나 모디 정부는 정책의 지속성 도모를 위해 2년 6개월 후 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동안 문제되어온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General Anti-Avoidance Rules)」에 대한 소급적용 면제, 시행일 연기 등 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인도정부의 신뢰도를 제고함.

■ 한편 모디 정부가 본격적인 개혁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

- 개혁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공조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중앙정부의 주정부 통제는 한계가 있음.

○ 인도는 중요한 경제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이 동등하여,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 주정부가 정책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15]

○ 2015년 2월 수도인 델리 주정부 선거에서 70석 가운데 NDA(National Democratic Alliance, 여당인 BJP 위주의 정치연합)가 3석으로 소수를 차지한 가운데, AAP[16]가 67석을 차지하며 델리 주정부를 장악함.

- 현재 여당은 상원의 20% 내외만 차지하고 있으므로 노동법 및 토지법 개정 등 주요 개혁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하지만 최근 인도의 부상은 지금까지 회자되었던 인도경제의 잠재력과는 차원이 다른, 인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이를 통해 중국에 버금가는 세계경제대국으로의 부상이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 Make in India, Clean India, Skill India, Digital India 등 모디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함.

○ 인프라, 제조업 등 인도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한·인도 협력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분야에 대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양국간 정보를 공유하여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또한 한·CEPA 업그레이드, 인도에 상설 협력 시스템 및 투자전담기관,[17] 인도 판 창조경제 혁신센터 및 인력개발센터[18] 설치 등으로 협력 강화

- 장기적으로 Make in India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경우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인도 경제협력의 전면적 확대개편이 요구됨.

○ 우리 기업들의 주요 해외 생산거점의 하나로 인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인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주 또는 도시 단위에 대한 경제협력 방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수립할 필요가 있음. KIEP

15) 인도는 헌법에 따라 노동, 교육, 재산권, 임야, 식품, 전력, 가격 조정, 세제 등 주요 경제 이슈는 'Concurrent List'로 분류하여 주정부도 중앙정부와 법 제정 및 집행에서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KIEP 2014, 「2015년 세계경제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6) AAP(Aam Aadmi Party, 보통사람의 당).

17) 일본의 경우 2014년 10월 인도에 투자를 촉진하기위한 기구인 '재팬플러스(Japan Plus)'를 설치함.

18)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입법화된 만큼 CSR의 일환으로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인력개발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인도의 변화된 경영환경에 선제적 적응 필요.